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김진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17('22-7) | 2022. 07. 01.

김정은의 핵 야망과 우리의 대응
문성목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한반도 안보
박용환

가시화된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해부
장광열

김정은의 핵 야망과 우리의 대응

문 성 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장)

올해는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되는 해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북한은 수많은 도발로 우리를 위협해왔고, 그 도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 들어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화성-17형, ICBM)까지 무려 19회나 도발을 했고 33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자위권은 곧 국권수호 문제라며 강 대 강, 정면승부 투쟁원칙을 재천명하고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 이어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할 원칙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결론지었다. 대적투쟁이란 대남관계를 지칭한다. 2020년 6월 김여정이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 그들의 도발은 계속 이어질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김정은의 핵 야망을 직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정은의 핵 야망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

김정은의 핵 야망은 대남적화전략에 기인한다. 지난 4월 25일 김정은은 항일 빨치산 90주년 야간 열병식 연설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 무력은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를 겨냥한) 핵 공격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에 앞서 4월 5일 김여정은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핵사용을 협박했다.

분단 이후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단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다. 6.25 기습 남침도 무력 적화통일을 시도한 것이었고, 이에 실패한 김일성은 제2의 6.25를 위해 군사력 강화와 함께 한미동맹의 파괴를 시도해왔다. 재래식 군사력으로 대남 군사력 우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북한은 지금까지 집요하게 핵·미사일 역량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ICBM 역량 강화로 미국을 한국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전술핵무기와 단거리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여 유사시 핵·미사일로 대남 정면승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 보유 관련 우리의 그릇된 인식을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의도에 대해 그릇된 인식이 존재했다. 첫째는 대미 협상용이라는 인식이다. 미국과 협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지렛대이며 동족에 대한 공격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정권 및 체제 유지 목적이라는 인식이다. 김씨 세습 정권의 핵 개발 업적을 과시하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셋째, 북한은 핵을 결코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를 향해 핵공격을 한다면 북한도 온전할 수 없기에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결국 우리의 북핵 대응에 장애가 되었음을 반성해야 한다.

김정은의 핵 야망을 좌절시킬 특단의 대응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한미연합억제력 강화와 강력한 대북압박으로 북한 핵을 무용화(無用化)시켜야 한다.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간 합의대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조속 가동으로 확장억제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연합 연습을 정상화해야 한다. 한국형 3축 체제 고도화, 미국의 MD 상호운용성 제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 지불을

강요해야 한다. 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사용할 수도 없고, 이를 유지하자니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방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 인권 문제부터 강력 제기해야 한다. 특히나 북한 주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무모한 도발을 실행한다면, 우리로서도 2018년 중단했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김정은이 물리적 핵폭탄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심리적 핵폭탄을 갖고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셋째,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진정 비핵화 대화에 호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고 이미 약속한대로 비핵화 실행에 적극 합류한다면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는 물론, 과감한 대북지원으로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든다면 손해가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끝내 핵 포기를 거부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이 훼손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면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특단의 대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반도 안보

박 용 환

(동국대학교 교수)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북한이 금년 들어 벌써 18회째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10년 동안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 시험발사 횟수는 총 95회로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8년 동안 북한을 통치하면서 쏘아올린 미사일 시험발사 횟수 17회에 비하면 5.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북한의 이와 같은 미사일 시험발사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타격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 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따라서 한동안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 소형화와 다종의 대륙간탄도 로켓 개발 등 핵무력 강화를 국방발전목표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2022년 들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함께 지난 2018년 폭발했던 풍계리 핵시험장을 복구하는 등 다시 핵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일본,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차량발사대(TEL)를 200여 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핵개발과 함께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했을 때 그 피해범위가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탐지가 어렵고 발사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없어 여기에 핵무기를 탑재한다면 은밀성과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인다.

첫째, 국제사회에 대한 무력시위이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2016년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결의 2270호’는 유엔 70년 역사상 비군사적 수단으로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외교류를 차단함으로써 북한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군사적 무력시위를 통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미사일의 성능고도화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그 사정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 정확도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미사일 CEP(원형공산오차: 미사일 1발을 발사했을 때 목표물에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명중률)는 세계 평균공산오차율 0.01~0.05%에 비해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0.15%~0.3%로 10배 정도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기술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학 전공이다. 김정은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교 특설반에서 포병학을 공부하였고, 졸업논문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포병사격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선동매체들이 김정은을 포병전술의 대가라고 추켜세우고 김정은이 자주 포병부대를 방문하는 것 등은 이와 무관치 않다 할 수 있다.

북한은 미사일 전력을 통합하고 자동화함으로써 언제라도 김정은이 발사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사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고, 또 전략군 예하에 편성되어 있는 스커드·노동·무수단 사단을 여단으로 개편하는 등 그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 육군 산하의 ‘미사일지도국’을 2012년 ‘전략로켓사령부’로 개칭한 데 이어 2014년에는 ‘전략군’으로 그 명칭을 군종사령부로 승격시켰다. 또 전략군사령관도 상장에서 대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을 북한의 핵심전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북한은 앞으로 중·단거리 미사일의 기술적 향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와 같은 전장중심이 짧은 지역에서 전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단거리 미사일이 효과적이고, 또 그 정확도가 향상되어야 실질적인 무기로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길 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하지만 1,000여 발이 넘는 북한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올 때와 동해상에서 SLBM이 은밀침투하여 수중에서 기습발사를 했을 때 과연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가시화된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해부

장 광 열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하, 북한의 청정지역 억지 주장

2018년 신년사에서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참가를 선언하면서 미국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시도는 먼저 한국과의 평화적 교류의 모습을 각인시키면서 점차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결국 그 해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그동안 굳게 닫혔던 미국과 북한 간 외교의 빗장이 풀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북 접근은 선대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범세계적 대북 제재로 인한 최악의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은 지속되었고 북한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위와 같은 북한의 경제상황은 2020년 초에 시작된 범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 정권은 코로나-19가 확인되자 이와 관련한 보도를 신속하게 함과 동시에 국가 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하였다. 연이어 그해 8월에는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행동으로 옮겼다. 이를 통해 육로, 철로, 해상, 공중의 통행수단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북한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북-중 국경을 엄중하게 봉쇄하였다.

북한의 코로나-19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은 세계속에서 더욱 그들을 고립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방역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국제적 교류가 차단되어 관련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병에 대한 실체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백신을 확보하는데 곤란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을 은폐함으로써 '우리식 방역대책'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들과 더불어 각종 자연재해와 살림집 건설 등의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은 북한의 경제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갔다.

북한의 코로나 발생 시인 및 의도

위와 같이 그동안 북한 정권은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단순히 방역에 대한 관심을 보였을 뿐 북한 내에서의 확산을 부정하고 청정지역임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5월 12일, 갑자기 그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시인하고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그들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코로나-19의 발생을 은폐하고 물밑에서 은밀히 이를 해결하는 임계점을 넘었다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외부와의 공식적인 접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최악의 삶을 영위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정권에 대한 결단을 강요하였는데, 올해 초, 북한은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이 다소 호전되자 신의주 지역에 무역 검역소를 설치하고 중국과의 무역 재개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개방이 필요한 시기에 있어 북한 정권은 급속하게 확산된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을 더 이상 덮어두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북한 내의 코로나-19 상황에 있어 그동안 북한 정권이 생각하고 있던 파급 효과가 심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뿐 아니라 수도인 평양지역에서 코로나-19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내부에는 그동안 코로나 백신이 전무한 가운데, 전 주민들이 노출되어 왔으며 최근 그 확산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최근까지 코로나 발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부의 열악한 의료체제와 폐쇄된 국가체제로 인하여 많은 관련 상황이 은폐되어 왔을 것이며 금번과 같은 대규모의 확산은 북한 정권이 수습하기 어려운 형국으로 몰아갔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 CNN은 북한 정권의 통제능력을 초과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세 번째는 금번 코로나 사태를 방치하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김정은의 독재적 세습 체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일 정권의 유물인 시신 운구 8인방 중 김정은을 제외한 7명을 권력에서 제거하였으며 핵무기 개발을 기반으로 하여 만성적인 곤궁을 헤쳐오며 오늘과 같은 김정은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자신과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핵무기를 완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핵무기로 인하여 북한이 강대국의 반열에 오름과 동시에 안보를 보장받는 일종의 정치적 상징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속 은폐한다면 민심이반이 가속화되고 핵무기의 상징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권력의 공고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의 정책적 방향에 미치는 함의

북한 정권은 현재 북한 내부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상황을 최소한의 피해에서 멈추게 하는 한편, 북한의 내부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최악의 경제상황을 탈출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정책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자국의 의료적인 인프라 부족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중국에서 만연한 코로나-19의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여 왔다. 그리하여 모든 대중국 국경지역을 봉쇄하고 공식적인 교류 및 무역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북한군 서열 2위였던 리병철을 중국과의 방역수칙 미준수라는 이유로 일시적이지만 권력에서 배제시켰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 내의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북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스스로가 중국식 방역체제 선호를 언급한 것을 보면 의료분야뿐 아니라 전반적인 대중국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을 시도할 것이다. 현재 ‘강대강’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그 관성으로 인하여 쉽게 가까워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과 방역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및 서방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비록 김정은 자신이 중국의 방역방식을 지향하겠다고 하였지만 과거 북한이 중국의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보여 온 전례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향상을 가시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만성적인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고와 와해된 북한의 경제체제를 복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에 대한 접근은 평창올림픽 때처럼 한국을 경유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 내부에 대한 통제를 한 층 더 강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 정권은 이번 사태를 북한 정권에 위협으로 간주하고 코로나-19를 빌미로 중국과의 이동과 통신을 포함한 교류는 물론 북한 내 지역 간 이동과 주민들 간의 언로를 강하게 통제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3대 세습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관련 학습을 독려하고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의 건축 및 토목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사회는 더욱 경직될 것이며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로서는 한층 더 힘든 일상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